

# 쿠바와 북한의 하이브리드(Hybrid) 정치경제\*

박영자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sister1102@kinu.or.kr

## I. 연구문제와 시각

1989년을 기점으로 한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지난 25년 이상, 쿠바와 북한에 암시장이 창발된 이래로 많은 경제적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두 국가의 장기 지속적 경제위기와 시장경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두 독재정권은 각각의 국가체제 내에서 지배적 위치를 유지하였다. 또한 핵과 개혁·개방 상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쿠바와 북한은 근대의 자본주의 시스템이나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해석할 수 없는 복잡한 경제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두 저발전 탈사회주의는 1990년대 이래 위기극복 과정에서 국가 섹터들에서의 공식경제와 비국가 섹터들에서의 비공식경제 간에 강한 연계로 드러난 ‘하이브리드 경제(hybrid economy)’<sup>1)</sup>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경제위기에 직면한 쿠바와 북한 양 국가의 정치권력은 국가경제 기구를 시장 세력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공존을 향상시킴으로써 정권의 생존 위기에 대처하였다. 특히 2006년 이후 권력을 이양 받아 2008년 공식 집권한 라울 카스트로(Raul Castro)와 2009년 후계자로 등장한 후 2012년 공식 집권한 김정은은, 일당지배 및 군부주도 국가경제 기구와 공존하는 다양한 영역의 생산과 투자를 발전시키며 공사영역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노련한 라울이 2011년 이후 개인적 자유와 함께

\* 이 글은 박영자 외,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서울: 통일연구원, 2015)의 제3장 “하이브리드(Hybrid) 경제: 두 독재정권의 지속 요인과 차이”를 수정·보완한 글이다.

1) 하이브리드(hybrid)의 사전적 의미는 (동식물의) 잡종, 혼성체, 혼합물, 혼종 등이다. 서로 다른 두 종(種)이 합쳐져서 새로운 종의 양상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로 해석할 때 다양한 분야에서 다소 상이한 의미를 결합해 사용하고 그 의미가 ‘깨김’으로 인해, 이 글에서는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를 그대로 활용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탄생, 즉 종의 변화를 주목하여 혼종을 넘어서는 변종(variety, 變種)이란 의미를 중시한다.

경제개혁과 정치적 자유화를 허용하는 조치를 본격화하며 2018년 권력 이양을 선언한 반면, 신생 독재권력인 김정은은 현재까지 개혁을 통제하고 개인독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인식에서 출발한 이 글은 1990년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현재까지 저발전 탈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와 북한에서 드러난 정치경제의 동질성과 차이를 규명한다. 분석을 위한 주요 이론과 분석틀은 세 가지이다. 첫째, 근대의 계획경제나 시장경제 유형으로 해석할 수 없는 탈사회주의 세계의 하이브리드 자본주의(hybrid capitalism) 이론이다. 둘째, 국가자원인 렌트(rents)<sup>2)</sup> 및 외부 요인을 활용해,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을 조율하는 문지기 국가(gatekeeper state) 이론이다. 셋째, 한 사회 내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시스템의 진화, 자기조직화, 새로운 질서의 창발을 밝히려는 복잡 시스템(complex system) 이론이다.<sup>3)</sup> 이러한 이론과 분석틀을 활용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5년간 쿠바와 북한에서의 경제시스템 진화과정을 중심으로 두 사회의 정치경제를 시스템 차원에서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세부 목표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계획과 시장 또는 공식과 비공식 경제가 혼합되어 새로운 경제시스템 양상을 보이는 ‘하이브리드 경제’의 진화과정에 기반해 두 독재정권이 장기 지속하는 요인과 동질성을 밝힌다. 다음으로 2015년 현재 미국-쿠바 수교로 드러난 쿠바와 북한의 상이한 변화 경로를 이해하기 위해 그 차이점을 규명한다. 이 동질성과 차이를 중심으로 우리의 대북-통일 정책에 시사점을 밝힌다.

연구문제는 세 가지이다. 첫째, 전환기 쿠바와 북한의 시장시스템 진화과정은 어떠한가? 이 문제는 또한 그 두 국가에서 왜 시민사회가 발전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둘째, 두 정권이 지난 25년 이상의 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지속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이는 두 국가의 핵심적 동질성을 찾기 위함이다. 셋째, 왜 이 두 국가의 변화 경로에 차이가 발생했는가? 이는 두 탈사회주의 세계의 차이점을 밝히기 위함이다. 이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국가, 시장, 사회 간 관계 및 상호 의존성을 중시한다. 분석을 위한 기본적 접근은 신제도주의 경제학자들의 시각에 기초한다. 그 양대 명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 국가의 번영 또는 빈곤은 정치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왜냐하면 국가의 번영이나 빈곤의 열쇠가 경제제도이나, 그 경제제도는 최종적으로 정치 및 정치제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sup>4)</sup> 다음으로, 독재체제처럼 국가의 지대(rents)와 권력에 대한 “제한된 접근 질서(the limited access orders)”는 경제와 사회의 주요 행위자들로 하여금 충성을

2) 본래 렌트란 지대(地代)를 의미하는 영어이다. 그런데 현대 경제학 및 정치학에서 그 개념을 은유적으로 발전시켰다. 따라서 최근 정치경제학분야에서 렌트는 공적권력에 의해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는 재화(財貨) 및 서비스 공급자가 독점적으로 얻는 이익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렌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6976&cid=42140&categoryId=42140>, 검색일: 2015. 10. 20).

3) 세 가지 이론 및 분석틀에 대해서는 박영자 외,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p.50~60 참조.

4) Daron Acemoglu and James A. Robinson,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Reprint edition, New York: Crown Business, 2013, pp.428-434.

유도하거나 강제한다.<sup>5)</sup>

이 같은 연구문제와 시각에 기초한 이 글에서는 쿠바와 북한의 복잡한 시장시스템과 그 시스템 내의 3대 행위자인 독재정치의 지배연합, 정경유착 세력, 일반 주민을 주목한다. 지난 25년 이상 두 독재체제의 정치경제 상황에서, 이 3대 행위자들 각각이 필요(needs)에 따라 드러낸 생존·이익추구·이권지속 등의 행태 및 상황을, 시장시스템의 역사적 진화 및 그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이 연구를 위한 하나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두 정권의 장기 지속성은 시장 행위자인 독재정치의 지배연합이 각 사회 내 시장시스템의 역사적 진화과정에서, 시장질서에 적응하며 신흥 시장 세력에 대한 조율과 통제를 통해 독점적 착취(an exclusive exploitation)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그 핵심 목적은 권력지속이며 이를 위한 두 가지 제도를 갖추기 위해서이다. 하나는 안정적인 통치자금 확보이다. 또 다른 하나는 위계적인 충성 네트워크 및 지지자들을 지켜 내기 위해서이다.

## II. 쿠바경제의 역사와 현황

현재 쿠바는 사회복지 수준으로 따지면 높은 수준이지만, 경제성장 지표로 보면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현재까지 쿠바 당국은 경제를 이끌어 오면서 스페인, 소련, 베네수엘라, 중국 등 여러 국가에 의존해 왔다. 주요 시기별로 쿠바경제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6)</sup> 1950년대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에 편입되었다. 이후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설탕, 니켈과 같은 산업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소련에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 소련이 전문가도 파견해 주고 쿠바의 물건도 구매해 주었다. 교역의 80%가 소련과의 교역이었다. 당시 쿠바정부는 그 수익을 주로 사회복지에 사용했다.

1989년 기점으로 소비에트가 붕괴하면서 쿠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생활수준이 낮아지기 시작했으며 불평등도 심화되었다. 또한 세계경제에 점차 편입되어 갔던 시기이다. 이 시기부터

5) Douglass C. North, John Joseph Wallis and Barry R. Weingast, *Violence and Social Order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263.

6) 이 장의 주요 내용은 2015년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된 통일연구원 쿠바 출장 기간에 인터뷰한 쿠바 아바나대학의 경제학과 오마르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 Bildner Center for Western Hemisphere Studies, Cuba: In Transition? Edited by Mauricio A. Font with the assistance of Scott Larson, New York, 2006; Julia E. Sweig and Michael J. Bustamante, "Cuba After Communism,"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13 issue; Nile Bowie, "Cuba's Economic Reforms: Socialism with Neoliberal Characteristics.?" *Russia Today*, April 16, 2014; Claudio Katz, "The Cuban Revolution: The Current Economic Reforms," *Global Research*, January 5, 2015(www.globalresearch.ca/the-cuban-revolution-the-current-economic-reforms/5422826); Javier Corrales, "Cuba after Fidel," *Current History*, February 2005(www3.amherst.edu/~jcorrales/documents/cuba%20after%20Fidel.pdf); Emily Morris, "Unexpected Cuba," *New Left Review* 88, *Newleftreview*, July-August 2014;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김기현 역자), 『쿠바: 경제·사회적 변화와 사회주의의 미래』, 파주: 한울, 2014 등에 기초한다.

정치적 변화도 컸고 쿠바경제가 향후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2011년 제6차 공산당 전당대회를 통해 쿠바당국이 발표한 경제정책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쿠바의 경제정책 방향을 자세히 알 수 있다. 민영화라는 개념에 도달하진 않았으나, “국유화하지 않은”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되고 경제운영 방식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쿠바경제를 옥죄고 있던 외채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국제경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쿠바의 현재 GDP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6차 전당대회 이후 2015년 현재 약 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쿠바 당국은 중국수준의 성장속도를 기대하고 있다. 희망하는 성장률이 지속된다면 2060년 이후 현재의 두 배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적자는 GDP 대비 2014년 현재 -3% 정도이다. 이는 쿠바정부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쿠바 내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의 대쿠바 경제제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쿠바의 화폐가치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쿠바는 지금 화폐문제(이중화폐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 문제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5년 현재 쿠바의 무역수지도 적자상태이다. 특히 재화부문 적자가 크다. 수입품목을 보면 소비재 및 중간재가 많다. 반면에 기계 같은 자본재 수입은 상당히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교역 대상국을 보면 베네수엘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중국, 캐나다, 스페인, 브라질 순서로 나타난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경제상황에 따라 쿠바의 경제가 영향을 받는 문제가 있다. 쿠바의 수출품은 전통적으로 설탕의 비중이 크다. 그런데 2013년에는 설탕이 상당히 줄고 기타 품목이 늘어났다. 이것은 의약품, 백신 등의 비중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담배수출도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금연 추세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제품 수출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교역을 보면 수출이 더 많다.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흑자인 상황이다. 한편, 쿠바에 관광 등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은 주로 캐나다인들인데, 쿠바-미국 수교 이후 미국인들이 쿠바에 자유롭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전체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하여 재정적자를 충당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쿠바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자영업자 육성정책이다. 이 정책에 따라 자영업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공기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신청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나 소유권 전환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350개 정도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지금 쿠바정부의 계획은 2016년부터는 식당 같은 경우 정부기업을 없애고 전부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셋째, 국영기업에 자율성을 확장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다. 그러나

각종 국가규제 및 사회주의적 관료주의 문화로 인해, 당국이 원하는 만큼 빠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sup>7)</sup>

복잡한 재정시스템의 원인인 이중화폐 문제는 경제개혁의 핵심 이슈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현재 추이로 볼 때 2016년 4월 전당대회를 거치며 향후 화폐정책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농업개혁 관련해서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유희지가 많은데, 이를 경작하려는 농민들이 원하면 분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농작물 가격은 도시의 임금노동자들에게 다소 비싼 편이다. 쿠바시장 내에서도 많은 규제가 해제되었다. 예를 들면 주택, 자동차 등을 매매할 수 있게 되었다. 휴대폰, 인터넷 사용은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 2013년부터 쿠바인들의 해외여행도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개인이 이를 필요로 한다면 아직까지 복잡한 절차와 비싼 거래비용이 든다. 예를 들어 현지거주 외국인이 자동차 한 대를 사는 데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고 한국 돈으로 1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한다.<sup>8)</sup>

최근 들어 쿠바 당국은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재정 측면에서도 과거에는 지방정부의 모든 재정이 중앙에서 나왔는데, 현재는 지방정부가 식당 등에서 세금을 걷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과 유사한 마리엘 경제특구이다. 이는 중국의 경제특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생겨난 것이다. 현재 400개의 투자프로젝트가 제출되었다. 2014년 12월 17일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선언 이후 제출된 프로젝트가 대부분이다. 투자프로젝트를 제출한 주요 국가들은 스페인, 멕시코, 중국, 이탈리아 등이며 미국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중 단지 7개 회사만이 승인되었다. 멕시코와 스페인 기업이 대부분이다. 2014년 신외국인투자법이 발효되었다. 목표는 외국인 직접투자 20~25억 달러 가량을 유치하는 것이다. 쿠바 정부가 투자프로젝트를 250여 개 발굴했다. 이 프로젝트의 규모는 87억달러 규모이다.

쿠바에는 아직 수많은 도전 과제가 남아있다. 기업부문에서는 시장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쿠바경제는 계획경제인데 계획대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계획도 하면서 시장경제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풀리지 않은 숙제이다. 쿠바가 지금 따라야 할 경제모델이 무엇인지 재정의해야 할 과제가 놓여 있다. 쿠바는 현재 식품수입이 많은데 이 중에는 쿠바에서 생산 가능함에도, 수입하는 품목이 많아서 식량생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개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개혁의 속도감도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잊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래야만 새로운 장이 펼쳐질

7) 한편, 2011년부터 한국으로 치면 재벌그룹(holding company)같은 OSDE라는 조직이 새로 생기기도 했다.  
8) 쿠바 거주 외국인 개인 관광업자 증언, 2015년 8월 3일 인터뷰 내용 중.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경제부문에서도 정상화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미국인 관광객 규모도 2015년 상반기에 50% 가량 증가했다. 아직 미국인이 쿠바에 자유롭게 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난 것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미국과 관계가 좋아지면 은행이나 건설, 농업, 통신, 교통과 같은 부문에서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쿠바경제를 개혁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면 쿠바경제에는 새로운 시대가 올 수 있다.

쿠바는 향후 2년간 새로운 역사가 전개될 것이다. 2018년 권력이양을 선언한 라울이 마지막으로 주재하게 될 공산당 전당대회가 있을 것이다. 헌법과 선거법도 개정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도 새로 선출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향후 2년간 벌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쿠바는 현재 어떤 시장경제 경로를 취할 것인가의 결정적 분기점에 와있다.

### III. 쿠바 시장시스템 진화 과정

1990~2014년까지 쿠바의 경제성장률 추이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쿠바의 GDP 추이: 1990~2014년

#### Cuba's Economic Growth Slows

*Real GDP growth, annual*



자료: Pew Research Center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5/05/28/what-we-know-about-cubas-economy/ft\\_15-05-27\\_cuba\\_gdpgrowth](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5/05/28/what-we-know-about-cubas-economy/ft_15-05-27_cuba_gdpgrowth), 검색일: 2015. 10. 16).

[그림 1]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1994년을 기점으로 체제생존의 위기를 넘어선 쿠바의 경제성장 추이는 나선형의 진화 패턴을 보여준다. 이 나선형 패턴이 의미하듯 지난 25년간 쿠바 경제시스템은 불안정하게 작동하였다. 그 과정에서 쿠바경제에 시장질서와 명령질서가 혼합되면서 하이브리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추이 및 경제 패턴, 그리고 선행연구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할 때,<sup>9)</sup> 쿠바의 시장시스템 진화과정은 세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1990~97년, 2단계 진화 국면은 1998~2005년, 3단계 진화 국면은 2006~15년 현재이다.

## 1. 1990~97년 1단계 진화: 인민생존 필요에 의해 촉발된 시장시스템 형성

1단계 진화 국면은 두 시기로 구분된다. 각 시기의 주요 상황과 행태는 다음의 <표 1>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국면에서 쿠바의 시장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작동하는 주요 행위자로서 일반 주민, 정경유착 세력, 그리고 지배연합이 형성되었다. 이 시기 시장시스템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반 주민들의 생존 욕구였다. 따라서 주민들이 쿠바 시장시스템 형성에 주요 동력이었다.

9) 주요 참고문헌은 Javier Corrales, "The Gatekeeper State: Limited Economic Reforms and Regime Survival in Cuba, 1989-2002"; Eusebio Mujal-Leon and Lorena Buzon, "Exceptionalism and Beyond: Civil-Military Relations in Cuba, 1986-2008," Cuba in Transition (ASCE, 2008); Vladimir Benacek, "Political Economy of Re-Integrating Cuba into the World Economy," Paper Presented at the 7th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omparative Studies (Vienna, September 2006), <www.cubasocialista.cu/texto/cscdcentro.html>; Frank O. Mora, A Comparative Study of Civil-Military Relations in Cuba and China: The Effects of Bingshang, Armed Forces & Society, vol. 28, no. 2 (2002); Joaquin P. Pujol, "The Cuban Economy in a World of Uncertainty," Cuba in Transition (ASCE, 2009); "Cuba Under Raul Castro: Economic Reform as Priority?," The Huffington Post, February 25, 2013; Mauricio A. Font, "CUBA: In Transition? Pathways to Renewal, Long-Term Development and Global Reintegration," (Bildner Center for Western Hemisphere Studies, The Graduate Center,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2006); Vegard Bye, "The Politics of Cuban Transformation-What Space for Authoritarian Withdrawal?"; Carmelo Mesa-Lago,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in Cuba: During the Crisis and Subsequent Recovery," CEPAL Review, no. 86 (August 2005); Richard Sharpley and Martin Knight, "Tourism and the State in Cuba: From the Past to the Fu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11, issue, 3 (Article first published online: 2 SEP 2008); Jose Azel, "How to Think About Change in Cuba: A Guide for Policymakers," Cuban Affairs, vol. 3, issue 3 (September 2008); "Cuba Struggle Against Corruption and Other Economic Crimes," Cuba Headlines, February 20, 2012; "Corruption in Cuba, The Cleanup Continues," The Economist Online, May 6, 2011; Julia E. Sweig and Michael J. Bustamante, "Cuba After Communism,"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13 issue; Nile Bowie, "Cuba's Economic Reforms: Socialism with Neoliberal Characteristics.?" Russia Today, April 16, 2014; Claudio Katz, "The Cuban Revolution: The Current Economic Reforms," (Global Research, January 5, 2015.), <www.globalresearch.ca/the-cuban-revolution-the-current-economic-reforms/5422826>; Javier Corrales, "Cuba after Fidel," Current History, (February 2005), <www3.amherst.edu/~jcorrales/documents/cuba%20after%20Fidel.pdf>; Emily Morris, "Unexpected Cuba," New Left Review 88, (Newleftreview, July-August 2014).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김기현 역자), 「쿠바: 경제적·사회적 변화와 사회주의의 미래」, 파주: 한울, 2014; 이성형, 「쿠바의 경제개혁: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전망」, 「경제와 사회」, 71호 가을호, 2006; 신석호, 「이행기 사회주의의 경제에서 인민들의 생존기술: 1990년대 이후 쿠바와 북한의 사례」, 『통일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2008 등이다. 그 외 2015년 7월 29~8월 6일 통일연구원의 쿠바기획 출장 시 참석한 미국 쿠바경제학회 25주년 기념학술대회 및 쿠바 현지조사 시 획득한 쿠바의 정치경제 관련한 자료 및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위의 자료들과 교차 검증하여 활용한다.

<표 1> 1990~97년 쿠바 정치경제의 1단계 진화

시기별 특징	주요 상황 및 조치
1990~93년: 암시장 확장과 시장경제의 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시스템 붕괴와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와 유사한 상황</li> <li>• 불안정한 배급 및 암시장 확산</li> <li>• 생존을 위한 혼돈 및 약탈적 시장질서 형성</li> <li>• 아래로부터의 시장 행위자 출현</li> <li>• 1991년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의 “평화의 시대 특별 시기(The special period in a time of peace)”를 위한 경제개혁 조치</li> <li>• 1992년 헌법 개정으로 협동기업과 합영기업 허용</li> <li>• 군부에 개혁·개방 권한 위임</li> <li>• 1993년 달러 사용 허용 및 이중화폐 제도 실시:</li> <li>* 일반 공산품 구매 시 사용하며 미국달러, 유로 등 외환과 환전 가능한 화폐인 태환페소(CUC) 및 배급품 구매나 농산물 시장에서 사용하며 외환과의 환전이 불가능한 화폐인 불태환페소(CUP), CUC : CUP = 1 : 24. 즉, 1CUC=24CUP.</li> </ul>
1994~97년: 시장시스템의 창발과 쿠바 정부의 제한적 경제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시스템과 세 행위자(일반 주민, 정경유착세력, 지배연합) 창발</li> <li>• 소비수준에서 상품생산과 가격원리의 부분적 인정</li> <li>•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간 공존 모색</li> <li>• 시장시스템 내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 및 피드백 본격화</li> <li>• 시장경제 확산에 대한 국가통제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조치 실시: 관광·텔레콤·천연자원 분야만 개방, 외국투자 및 외화유입(주로 미국으로부터)은 환영했지만 쿠바국민의 기본적인 재산권(rudimentary property rights)은 제한</li> <li>• 개혁·개방의 수혜가 군부와 당원들에게 귀속</li> <li>• 쿠바정부에게 달러가 필요한 동시에 ‘정치적 충성(political loyalty)’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했음: 시민들에게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군대와 쿠바 공산당 당원에게만 특권 부여</li> <li>• 군부가 달러경제 주도: 군부가 다수의 여행시설을 소유·관리, 외국투자자와의 공동 벤처 및 대외부문(external sector)의 각료 자리를 차지</li> <li>• 이 같은 조치는 쿠바정권을 살아남게 했지만 군부주도의 독점자본가(Monopolist capitalists)를 형성</li> <li>• 시민들이 돈 버는 방법: 비공식 시장경제에 참여, 여행객으로부터 팁 받기, 군대 또는 정부 관료와의 후견-피후견 연결망, 해외(주로 미국) 친인척으로부터의 송금을 통한 외화 획득</li> <li>• 1996년 미국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헬름스-버튼 법(Helms-Burton legislation) 발효: 쿠바와 거래하는 외국기업에게도 금수조치</li> </ul>

## 2. 1998~2005년 진화의 2단계 국면: 사적 이익을 위한 정경유착 세력의 확장기

이 국면에서 쿠바 시장경제는 확장되었다. 이를 추동한 주요 세력은 개혁·개방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리며 이권을 확장하였던 군부 중심의 관료 및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상업적 이익을 누렸던 중소규모의 자산가들이었다. 즉, 국가자원을 가지고 국가의 문을 지키고 있던 군부 관료인 문지기들이, 그들이 관장하는 지대를 매개로 새롭게 떠오르는 상업자본가들과 결탁하여, 핵심적인 이권 세력이자 시장 세력으로 성장한 시기이다. 이 국면은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1998~2002년간 시장질서의 확산기이다. 다음으로 2003년 쿠바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2005년까지 정권이 시장에 대한 통제를 본격화한 시기이다.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전 사회적으로 ‘비사회주의 현상’이 만연한 것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었다.



〈표 2〉 1998~2005년 쿠바 정치경제의 2단계 진화

시기별 특징	주요 상황 및 조치
1998~2002년: 시장질서의 확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3년 달러 사용이 허용되자 소비부문에서 경제가 활기를 띠었으나, 2000년 전후 정치적 불안정과 함께 일반 주민부터 기관 행위자들까지 달러를 저장하였으며 국영기업보다는 사적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li> <li>• 헬름스-버튼법(Helms-Burton legislation) 발효(1996년) 후 외화 부족문제 심화</li> <li>• 2000년대 들어 관광 및 니켈 수출 붐, 농업·서비스 부문 경제개혁으로 경제위기 지연: 이 과정에서 쿠바 핵심 수출산업인 설탕부문은 대폭 축소되고 관광산업이 달러수입의 주창구로 변화</li> <li>• 비사회주의 현상의 만연</li> <li>• 사회적 불평등 및 시장시스템 확산</li> <li>• 군부주도 개혁·개방 및 시장경제 확산으로 계획과 시장 질서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시장시스템 발전</li> <li>• 시장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과 피드백 확산</li> <li>• 시장시스템을 통한 부패와 후견주의의 제도화</li> </ul>
2003~05년: 시장시스템 확산에 따른 정권의 정책 조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년 쿠바 외환위기: 높은 비율의 군대 예산 및 경제적 병폐(가격왜곡, 비전통적 수출가의 스태그네이션(stagnation), 해외투자 감소, 설탕산업 붕괴, 국영기업의 비효율성)로 인해 현금이 바닥나 외환위기 발발</li> <li>• 이에 대해 2004년 쿠바정부는 “Resolution 80”을 발표: 소매 거래에서 달러 사용을 금지하면서, 시장행위자들과 주민들이 달러를 폐소로 바꾸도록 유도해 달러를 확보하고자 함(10%의 charge를 붙여 이를 정부가 수탈)</li> <li>• 쿠바정부는 이 모든 상황이 쿠바가 자금세탁을 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미국의 대쿠바 벌금(1억 달러) 등 경제제재 조치 때문이라고 선전</li> <li>• “Resolution 80”으로 쿠바국민의 경제활동은 큰 타격을 받았으며 쿠바를 떠나려는 시민들이 증대: 이에 대해 쿠바정부는 탈쿠바인 사형 및 사회운동가 수용소 감금 등 강력한 통제</li> <li>• 베네수엘라의 지원 및 노동력 송출, 관광수입 등으로 그럭저럭 체제지속을 위한 경제력 유지</li> <li>• 전체 사회에 부패와 후견주의의 확산</li> <li>• 만연한 비사회주의에 대한 정권의 위기의식 고조</li> <li>• 정권의 시장통제 및 규제 강화</li> <li>• 그러나 정권 지속의 주요 수익원이 군부가 주도하는 외국과의 시장경제를 통한 것이며 이와 연동된 산업이 발달되었기에, 시장 행위자들의 활동을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li> </ul>

이 시기 특징은 〈표 2〉와 같다. 이 국면에서 시장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발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부패와 후견주의(clientelism)가 쿠바 시장시스템에 정착되었다. 또한 정권이 시장질서에 대한 관리와 개입을 본격화함에 따라, 시장시스템에서 지배연합의 역할이 증대하였다.

### 3. 2006~15년 진화의 3단계 국면: 독재의 지배연합이 주도하는 시장시스템

각종 국가이권을 매개로 쿠바의 중상층 정치경제 작동에 핵심제도로 기능했던 부패가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쿠바 전체 사회로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비사회주의의 현상이 만연하였고, 이에 따라 쿠바 당국의 위기감이 증대되었다. 더불어 2006년 이후 피델로부터

라울로의 권력이양이 이루어지면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명분하에 새로운 지배연합이 구축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지배연합은 이미 라울의 군부에서 각종 국가자원을 관장하며 문지기로서의 수혜를 극대화하려는 이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더 많은 이익과 권력을 원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그들이 관리하는 국가의 문을 열어서 더 많은 자원을 관장하고, 그 수익으로 국내 정치경제에 대한 지배권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군부를 중심으로 한 독재의 지배연합이 국가자원의 문고리 장악을 확고히 하면서 더 많은 자원이 유입되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국내외 시장시스템과의 더 높은 호환성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쿠바의 지배연합에겐, 자원 독점력을 높일 수 있는 국제적 경제환경과의 거래를 어렵게 하는, 미국과의 수교가 필요했다. 미국과의 수교를 위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유연한 개혁·개방 조치 및 정치사회적 민주화 진전이 동반되어야 했다. 쿠바정부는 2009년 이후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여 각종 경제개혁·개방 조치를 실시하였다. 한편, 국민경제 차원에서 쿠바정부의 반부패 조치들은 실패하였다. 그러나 독재의 정치경제 측면에서 그 조치들은 그리 나쁘지 않은 정책이었다. 2006~15년 현재까지 쿠바 시장시스템에 대한 정권의 직접적 통제와 규제 결과로, 쿠바 시장시스템 작동의 주동세력으로서 지배연합의 지위가 확고해진 것이다. 이 국면은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 상황 및 특징은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국면에서 쿠바정권은 군부를 중심으로 기존 시장시스템과 신흥 부유층 등에 대한 공격 및 조율을 통해, 통치자금을 확보하고 ‘위계적 충성 네트워크(vertical loyalty networks)’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이 3단계 국면을 통해 쿠바의 지배연합은 쿠바 시장시스템의 중심부에서 시장활동을 조정하며, 통치에 이롭도록 조율하는 공격과 함께 정권이 시장작동의 중심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개혁·개방을 단행하였다.

2011년 6차 당대회 이후 급진전한 쿠바의 개혁·개방 정책은, 2015년 현재 외화가 바로 들어오는 관광산업 외에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개혁·개방의 모든 문고리를 지배연합이 부여잡고 국가통제를 지속 및 재구성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쿠바 당국은 쿠바의 최대 유통망 중 쿠발세(CUBALSE)를 해체하여 상점망 대부분을 쿠바 국방부 산하 TRD(Tienda Recaudadora de Divisas)로 인입하였다. 또한 CIMEX라는 대형 유통망 사장을 해임하고 국방부에서 사장을 대행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모든 국영 상점망을 국방부로 편입하였다. 더불어 쿠바 독점 통신회사의 외국자본인 이탈리아 텔레콤의 지분을 국방부 산하 기업에서 인수하는 등 통신분야에도 국방부의 이권이 확장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 3단계 진화 국면을 경유하며 쿠바의 지배연합은 쿠바 시장시스템의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주동자로서 쿠바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및 장기지속에 기여하고 있다.

<표 3> 2006~15년 쿠바 정치경제의 3단계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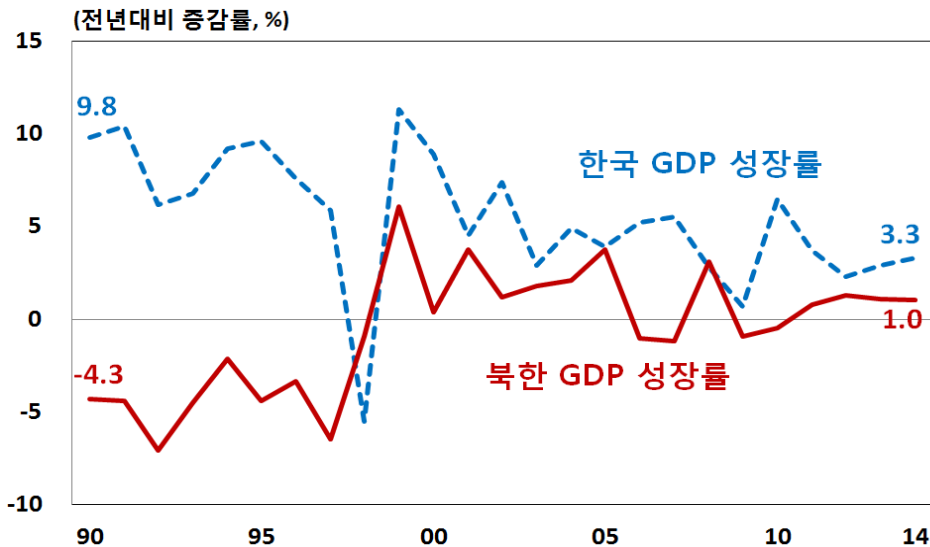
시기별 특징	주요 상황 및 조치
2006~08년: 정권의 시장시스템 내 행위자 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li> <li>• 임금이 소비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너무 부족하기에, 사람들은 소득보전을 위해 암시장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델의 지시로 이루어진 2005년 연구에서, 쿠바 내 2천여 개 주유소 중 1천여 개에서 기름이 빼내어져, 총 공급량의 80% 정도가 암시장을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밝혀짐: 이는 고위관료들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판명</li> </ul> </li> <li>• 부패척결이란 명분하에 시장시스템 내에서 활동하는 정경유착 세력 및 일반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 공격</li> <li>• 자유 시장질서를 독재정치를 위한 통제질서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 및 강제</li> <li>• 2006년 7월 말 피델의 병환 및 장출혈 수술로 그의 동생 라울에게로 임시 권력 이양</li> <li>• 부정부패 척결이란 명분으로 피델 시기 주요 이권부문의 권력 엘리트들을 경질하고, 라울의 지지세력들을 임명</li> <li>• 라울 등장 이후 상당한 장관급들이 경질되었으나, 여러 분야에서 횡령·회계조작·부패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li> <li>• 2008년 2월 라울 카스트로를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공식 선출: 공식적 정권 이양</li> </ul>
2009~15년: 시장시스템을 주도하는 독재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 말 3차례 허리케인 이후 경제피해 막심: 재난 대처능력 부족 및 시장시스템 공격 등으로 라울체제의 위기</li> <li>• 2009년 이후 라울의 경제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혁위원회를 만들고 다양한 분야의 논의를 추동, 반부패청(anti-corruption general agency) 설립, 에너지·탄광·설탕 등 주요 부서 재구조화</li> <li>* 재정·신용·이민 분야 개혁, 협동농장(cooperatives)법, 쿠바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소비재(부동산, 중고차, 패스트푸드, 식당) 시장의 법제화 등 통해 제도변화(institutional changes) 추진</li> </ul> </li> <li>• 2009년 라울의 권력구조 조정: 2009년 6월 피델의 심복이며 차세대 유망 정치인인 경제총괄 부통령 카를로스 라헤 및 외교부 장관 펠리페 로케(Felipe Perez Roque)를 숙청하고, 라울의 군부와 혁명 세력을 기용, 2009년 대규모 정부조직(Council of Ministers) 개편과 사정활동 통해 장관 및 공기업 사장 등 주요 이권 직책에 군부 중심의 기용, 조직개편을 통해 라울은 지방의 군사령관 및 당과 정부 내 중간관료의 세대교체를 추진하며 피델로부터의 권력이양 완성</li> <li>• 2010년 공무원 대규모 감원, 자영업 허용 등 경제개혁 시동</li> <li>• 2011년 4월 14년만의 제6차 공산당 전당대회 통해, 피델이 당 제1서기직에서 사퇴하고 라울이 제1서기직으로 취임하여, 완전한 제도적 실권자로 라울 등극</li> <li>• 6차 당대회에서 배급제 축소·폐지, 차량·주택 매매와 교환 허용, 자영업 육성, 외국인투자(외자유치) 활성화, 해외관광 여행 허용 검토, 부정부패 근절, 은행의 개인대출 등 300여 개 경제사회개혁안 의결(5년여 간의 입법과정 거쳐 시행 예정) 승인</li> <li>• 2013년 1월 내국인의 해외 여행 자유화</li> <li>• 일련의 개혁과정에서 숙청과 함께 권력·이권 재분배: 라울 측근들이 장관 및 공기업 사장 등 요직에 취임</li> <li>• 면허과정(Licensing process)을 자유화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생산 스케일을 증대하면서, 2010년과 2013년 소상공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16만명에서 39만명으로 크게 증대</li> <li>• 정부의 세수 확대: 운수업, 음료판매점, 주택임대업, 개인 식당 등 중심으로 자영업을 확대하며, 자영업자별 세금납부 의무 부과</li> <li>• 정부와 비정부 부문 간 계약이 자유화되어, 두 부문 간 생산적이고 행정적인 시너지가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 증대</li> <li>• 2012년 협동농장법 승인으로 농업생산, 서비스, 운반, 소규모 산업에 대한 정부통제 약화</li> <li>• 농업분야 생산성 제고 조치: 2차(second degree) 협동농장·클러스터 협동농장, 생산증대, 다양한 협동농장이 안정적 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협동농장법의 법적 메커니즘 허용</li> <li>• 협동체제는 정치적 프레임워크 간 합의로 볼 수 있으며, 협동농장의 재산권은 소상공업 부문보다는 덜 보장(less defined): 즉, 국영기업도 아니고 사적 비즈니스도 아닌 상황</li> <li>• 자산(택시, 식당, 카페테리아)을 팔거나 세를 주면서 정부수입을 극대화했던 방식 대신에, 기존 노동자들에게 정부자산의 사용 수익권을 주고 세금 유입 추진</li> <li>• 2011년 중고 자동차 매매에 이어 2013년 일반인에 대한 신차 판매를 허용했으나, 그 가격이 한국 돈 1억원 이상이라 정부기관 관료 등 특권층과 신용 부유층만 소유 가능</li> <li>• 정권에 의한 경제제도 재구축 방향: 국가의 통제권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농장·공장·사업 분야에 대한 자율관리 정책 확대, 인센티브 제도 발전, 외화유입 촉진</li> <li>• 개혁 현실의 난관: 효율적 계약을 위한 준비와 실행에 있어 법적·행정적 경험이 부족하며 정치 우위성이 여전히 강한 쿠바가 이 같은 개혁을 단계적으로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li> </ul>

## IV. 북한 시장시스템 진화과정

북한의 시장경제 발전은 1980년대 계획경제 위기 이후 1989년 평양축전으로 대표되는 과시성·우상화 사업 지속, 공산권 경제상호원조회의인 코메콘(COMECON) 붕괴, 배급제 불안정, 외화벌이, 자력갱생 정책, 장마당 경제, 주민 생존방식의 진화,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대북제재, 북한정권의 경제정책 변화 등을 배경으로 한다. 이 대내외적 배경이 상호작용하며 독재정권의 통치자금 유입과 관련된 당, 군부, 내각 경제의 재정운영 및 수탈이 구조화되었다. 북한경제의 변화과정을 쿠바와 비교하기 위해 1990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를 도형화하면 [그림 2]의 실선과 같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대 체제생존 위기를 넘어선 북한의 경제성장 추이 또한 쿠바와 같은 나선형의 진화 패턴(그림 1 참조)을 보여준다. 이 나선형 패턴에 따라 지난 25년 이상 북한의 경제시스템이 불안정하게 작동하였다. 그 과정에서, 앞서 살펴 본 쿠바의 시장시스템 진화 특성과 유사하게, 북한경제에 시장질서와 명령질서가 혼합되면서

[그림 2] 한국과 북한의 GDP 추이 비교



자료: 한국은행, '2014년 북한 경제 성장률 추정 결과 보도자료', 2015. 7. 17(<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menuNavild=559&boardBean.brdid=118286&boardBean.menuid=559>, 검색일: 2015. 10. 16).

하이브리드 경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2005~07년을 기점으로 자생적 시장경제가 정권에 의해 재구성되며 하락과 상승 양상을 보인다. 이는 북한의 시장경제가 상당한 내구성을 갖추고 독재정권의 체제생존 방식과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추이 및 패턴, 그리고 선행연구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할 때,<sup>10)</sup> 북한 시장시스템의 역사적 진화과정 또한 크게 3단계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1990~99년이다. 2단계 진화국면은 2000~06년이다. 3단계 국면은 2007~15년 현재이다.

## 1. 1990~99년 진화의 1국면: 일반 주민들에 의해 촉발된 시장시스템 형성기

이 국면은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시기 및 시기별 특징을 보면, 첫째, 1990~94년 암시장 확산기이다. 이 시기는 불안정해진 배급제에 따라 국경지역 주민들로부터 밀수와 함께 암시장이 확장되었다. 군부 역시 군대유지의 목적 등으로 군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무역 등 시장경제에 참여한 시기이다. 둘째는 1995~97년 자생적 시장 형성기이다. ‘고난의 행군’과 함께 무질서한 생존형-수탈적 시장경제가 형성된 시기이다. 셋째 시기는 1998~99년으로 국가의 시장 정비기이다. 이 국면에서의 시기별 주요 특징 및 각 시기별 상황과 주요 조치는 <표 4>와 같다.

이 국면에서 북한의 하이브리드 경제 양상이 드러났고, 시장시스템의 3대 행위자인 일반 주민, 정경유착 세력, 그리고 독재정치 지배연합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 국면에서 북한의 시장시스템을 창출하고 움직였던 핵심 행위자는 일반 주민이었다.

10) 다양한 선행연구는 Young-Ja Park, "Evolutionary Peculiarity between 'the Market System and the Dictatorship' in North Korea," 한국정치학회 2012 추계학술회의 발표문, 2012. 8. 31 참조.

<표 4> 1990~99년 북한 정치경제의 1단계 진화

시기별 특징	주요 상황 및 조치
1990~94년 암시장 확산기: 주민생존 차원의 시장질서 창발 및 군대 재정마련 위해 무역 등 국제 시장경제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주의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붕괴</li> <li>• 배급제 불안정과 주민생존 과정에서 농민시장+암시장 확산</li> <li>• 정권의 체제생존 위기감 급 증대</li> <li>• 인구 100만여 군대의 국가재정 지원 위기</li> <li>• 1980년대 말 '유령회사'식으로 군부의 무역이 시작된 후 이 시기 확산</li> <li>• 1994년 김일성 사망</li> <li>• 자연재해에 따른 흉작</li> </ul>
1995~97년 자생적 시장 형성기: 무질서한 생존형 시장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급제 붕괴 및 암시장 전연화: 방임형 시장 형성</li> <li>• 무질서한 생존형 '약탈적 시장경제'</li> <li>• 경제적 이권과 정치적 보호를 매개로 한 뇌물과 부패 등장</li> <li>• 국제사회의 대북원조: 국가가 관리하며 국가자원으로 활용</li> <li>• 무역기관의 다양화: 무역성이 국가무역을 독점하던 시스템의 붕괴, 무역성 산하 무역이나 각 권력기관의 기관무역이나 그 기능이 동질화</li> <li>• 군부 산하 외화벌이 회사인 54부와 같은 회사가 무역성보다 규모 증대</li> </ul>
1998~99년 국가의 시장 정비기: 김정일 정권의 '약탈적 시장경제'에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8년 김정일 공식 집권</li> <li>• 암시장을 벗어난 '시장'(장마당)</li> <li>• (소비품 수준의) 상품과 가격 원리 부분 인정</li> <li>• 계획과 시장의 공존체제 모색</li> <li>• 시장경제의 주체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으로서 무역회사, 투자자로서 돈주, 도소매 상인, 소비자 등</li> <li>* 소생산 단위인 가내작업반 및 부업반 발전</li> <li>* 군(郡)단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지방 중소공장</li> </ul> </li> <li>•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원조 수탈</li> <li>• 시장과 무역 활동에서 뇌물 및 부패 증대</li> <li>• 각 기관의 자력갱생 경제활동 인정 및 무역회사 정비</li> <li>• 북한의 하이브리드 경제에 3대 행위자인 일반주민, 정경유착 세력, 지배연합 형성: 이 시기 시장작용의 주동력은 일반주민</li> </ul>

## 2. 2000~06년 진화의 2국면: 시장경제 진화 과정에서 정경유착 세력의 전진

이 국면에서 북한의 시장경제는 급격히 진화하였다. 정부의 각종 부분개혁 조치와 복중교역 활성화, 그리고 대외원조 및 한국·국제사회와의 자원거래 연계도가 높아지는 등, 시장경제 활성화 요인이 상호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자원을 움켜쥔 관료들과 시장활동을 통해 새롭게 성장한 신흥 부유층인 돈주 및 상인 등 사이에 다양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즉, 후견-피후견 관계가 시장시스템을 움직이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권력과 부가 공생하는 정경유착 그룹이 북한 시장시스템 작동에 중심부에서 성장하였다. 더불어 시장발전과 다양한 국내외 시장활동 과정에서 성장한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정권의 위기감이 고조되며 정경유착 세력 및 시장활동에 대한 정권의 조율이 진행되었다.

이 국면은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시기는 2000~04년으로 북한정권이 부분적

개혁·개방을 주도하며 시장시스템이 활발히 작동하던 시기이다. 또 다른 시기는 2005~06년으로 시장경제 발전으로 인한 정권의 위기감이 고조되며 시장 및 외화벌이를 중심으로 한 주요 시장세력인 정경유착 그룹을 정권이 통제 및 재정비하던 시기이다. 각 시기별 특징 및 주요 상황과 당국의 조치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이 2단계 시장시스템 진화 국면에서 시스템을 움직이는 핵심 주체는 정경유착 세력이다. 이들은 자신과 자신의 네트워크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조정하였다. 이들은 시장경제에 얽혀 있는 일반 주민들과 지배연합 양측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였다. 특히 지배연합으로부터 각종 국가 자원 및 노동력 등 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사회에 뇌물과 부패가 만연해지고 부익부 빈익빈, 경제적 계층 위계화, 비사회주의 현상의 만연 등 각종 사회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 양상이 독재정치의 정치시스템 작동을 위협하였다. 따라서 정권이 이들을 조율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다.

<표 5> 2000~06년 북한 정치경제의 2단계 진화

시기별 특징	주요 상황 및 조치
2000~04년: 북한 당국의 시장 확산 및 포섭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분개혁: 상품과 가격 원리 체제 내 도입 *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2003년 종합시장제</li> <li>• 사회주의 상품경제 도입</li> <li>•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이중 경제체제</li> <li>• 시장 주체들 간 상호작용과 피드백 확산</li> <li>• 권력기관들의 수탈 경쟁</li> <li>•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원조물품 판매·유용 등 원조수탈 증대</li> <li>• 북한의 정치·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뇌물과 부패 구조 형성: '권력·부의 공생' 네트워크 발전</li> <li>• 북한의 주요 권력기관이 무역·상업 활동으로 재정적 자립 구조 형성</li> </ul>
2005~06년: 정권의 시장경제 억제 및 조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경제로 인한 정권의 '비사회주의 현상 만연' 위기감 고조</li> <li>• 시장경제가 북한 내 공장·기업소 생존에 보편화</li> <li>• 북한정권의 시장경제 조율 및 상품경제 허용조치의 조정</li> <li>• 2006년 1차 북핵 실험 후 대북지원 감소</li> <li>• '비사회주의의 검열' 강화로 뇌물과 부패에 대한 김정일 정권의 조율</li> <li>• 권력기관들의 수많은 외화벌이 회사 정비</li> <li>• 각종 검열과 기관 외화벌이 정비 과정에서 통치자금 확보</li> </ul>

### 3. 2007~15년 진화의 3단계 국면: 독재정치 지배연합의 시장시스템 주도

이 국면에서는 시장시스템에 대한 북한정권의 조율, 공격, 재구성 등이 연이어 전개되었다. 이 과정을 경유하며 북한의 시장시스템을 주도하는 핵심 동력은 독재정치의 지배연합이 된다. 이 3단계 국면은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시기별 특징 및 주요 상황과 당국의 조치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2007~15년 북한 정치경제의 3단계 진화

시기별 특징	주요 상황 및 조치
<p>2007~09년: 수령경제에 시장경제 인입 본격화 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년 이후 2009년 11월 화폐교환 조치 기점으로 시장경제를 수령독재 경제에 인입 본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시장의 농민시장으로 전환 시도 및 강제</li> <li>* '비사회주의 서식장'으로서 시장 통제 또는 폐쇄</li> <li>* 상품·화폐·가격 허용조치(비공식적) 폐지</li> <li>* 배급제 전면화 선언, 화폐교환 조치(화폐개혁)와 외화사용 통제</li> </ul> </li> <li>• 2009년 김정은 후계자 지정 후 후계체제 위한 통치양식 조정 필요 상승</li> <li>•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 대북정책'과 2009년 2차 북핵실험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급감</li> <li>• 화폐교환, 외화통제, 각종 검열과 기관 외화벌이 통제 등으로 통치자금 증대 시도</li> <li>• 권력기관, 외화벌이 회사에 대한 재정검열 및 대대적 '비사회주의 검열'로 수령경제에 시장시스템을 활용한 수탈구조 적극 인입: 수탈 통한 통치자금 인입 구조 강화</li> <li>• '정치적 보호'를 위한 상층의 권력-부 공생 구조 발전</li> </ul>
<p>2010~11년: 시장경제 회복과정에서 '수령경제=수탈경제' 의 하이브리드 경제 형성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급재개 불발 등의 정책실패로 2010년 1월, 하층민 생계위기 가시화 및 하루벌이 하층민 사망 등으로 민심 혼란</li> <li>• 화폐개혁·외화조치·배급제 재개 실패</li> <li>• 주민 생계문제로 인해 지역에서부터 시장운영 목인</li> <li>• 2010년 5·26 조치 등으로 시장경제 일부 허용</li> <li>• 시장경제 행위자들의 상품축적 효과 발휘</li> <li>• 달러 및 중국 위안화가 시장경제의 기축통화로 작동</li> <li>• 북한 지역 대부분의 영역에서 뇌물이 기본적 거래비용으로 작동: 가격균일화 등</li> <li>• 비공식 정치경제 시스템으로 '후견-피후견의 부패구조' 제도화</li> <li>•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장마당 경제, 내각경제, 외화벌이 무역회사들로부터 통치자금 유입 증대</li> <li>• 주요 권력기관들 내 독립적 은행 갖춘 대규모 무역회사들 성장</li> </ul>
<p>2012~15년: 김정은식 하이브리드 경제시스템 창출 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김정은 공식집권 후 시장규제 완화 및 시장경제 활성화</li> <li>• 평양 등 대도시 건설에 과시성·우상화 사업 급 증대</li> <li>• 2012년 하반기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이하 6·28방침) 도입 및 2014년 5·30조치: 기관 및 주민들의 재정자립, 인센티브 인정, 자율관리제 시도</li> <li>• 쌀값 및 환율 상대적 안정</li> <li>• 개방특구 설치 등 외자유치 노력과 노동력 수출 증대</li> <li>• 기존에 당원과 외화벌이 일꾼들이 내던 '충성의 자금'을, 주민들이 적은 액수라도 현금으로 지불하게 유도: '국가납부금'과 '충성자금'이라는 수탈체제를 주민들까지 확대하여 사회 제도화</li> <li>• 기관, 엘리트, 상인 등 모두에게 국가납부금과 충성자금이 구별되지 않는 질서 형성: 김정은 정권에게 바치는 의무적 세금화</li> <li>• 충성자금을 많이 내는 개인이나 권력기관들의 성장</li> <li>• 김정은 정권의 핵심 권력엘리트 숙청 과정에서 아권을 둘러싼 관료와 기관들의 쟁투·충성경쟁 심화</li> <li>•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 증대 요구 등으로 각 기관 엘리트들의 무모한 외화벌이 행위 증대</li> <li>• 이권(利權) 지속과 증대를 위한 후견-피후견의 부패구조가 김정은 정권의 정치경제 행태에 깊숙이 개입</li> </ul>

이 3단계 북한 시장시스템의 진화 국면에서 북한 시장경제의 주동세력은 독재정치  
의 지배연합이 되었다. 더불어 1980년대 북한의 계획경제 위기 이후 2015년 현재까지, 코메콘  
(COMECON) 붕괴, 과시성 건설·우상화 사업 지속, 배급제 불안정, 외화벌이 발전, 자력갱생,  
장마당 경제, 주민 생존방식의 진화,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대북제재, 북한정권의 시장  
통제 또는 활성화 정책 등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3대 세습의 독재체제가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북한 정치·사회에 하이브리드 경제가 제도화되고 있다. 하이브리드 경제가 초래하는 수탈체제 하에서 수령과 소수 지배연합으로부터 각 지역단위 및 당·군·정 권력기관이, 위계적 네트워크를 통해 외화벌이 회사 및 기지장, 중하급 관료, 돈주와 상인, 그리고 이해를 가진 북한주민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편으로 가장 큰 재원을 움직이는 수령경제의 워크(무역권) 할당 및 국가권력의 각종 지대(rents)를 매개로 진화한 시장화, 상업화, 주민들의 시장을 통한 경제적 생존구조 등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폐쇄·화폐교환·외화 사용금지·기관 및 개인의 시장거래 금지 조치 등으로 시도는 했으나, 국가경제를 최소한 1980년대 계획시스템으로 복귀시키지 못한 북한정권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시장경제를 권력지속에 이롭도록 정치적으로 관리한 결과이다.

## V. 동질성과 차이

### 1. 동질성

지난 25년 이상 쿠바와 북한에서의 시장시스템 진화과정을 볼 때 다음과 같은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이 두 국가는 1990년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래로부터 형성된 시장 세력들을 조율하였다. 또한 시장경제를 정권 지속에 이롭도록 점차 독재체제 내로 인입하였다. 그 결과 명령경제와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양상을 넘어서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드러났다. 즉, 하이브리드 경제의 특징을 공유한다.

둘째, 이 두 국가는 경제위기가 주민들의 생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며 체제지속을 어렵게 할 때 경제개혁에 나섰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넘기면 다시 정권 주도의 보수적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는 나선형의 경제성장 추이로 드러났다. 즉, 이 두 정권은 ‘성공의 결과로 생긴 체제이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통제경제를 강화하는 문지기 국가의 행태를 공유한다.

셋째, 지난 25년 이상의 시장 진화과정에서, 쿠바와 북한의 당·군 지배연합은 정경유착 세력을 정권 내로 인입하면서 시장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때 국가의 자연자원, 노동력, 각종 인허가권, 무역권한 등 지대(rents)가 그 매개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두 정권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

넷째, 이 두 국가는 공히 자국 화폐의 영향력 약화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쿠바는 미국

달러의 국내 영향력을 막아내기 위해 1993년 이래 이중화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시스템 진화과정에서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영향력이 강해졌다. 북한 역시 2009년 11월 화폐개혁의 실패 이후 달러화(dollarization)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달러 또는 중국 인민폐가 기축통화로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화폐의 영향력이 약화된 상태이다. 현재 양 국가의 열악한 생산구조에 기초할 때, 국내 화폐의 영향력 약화는 양 국가의 경제 안정화 및 독립적 경제발전을 어렵게 한다.

다섯째, 두 사회는 공히 불평등 심화, 계층 간 격차 심화, 국내 화폐경제와 해외 화폐경제의 양극화, 부패의 제도화, 군부의 독점 자본가화라는 특징을 공유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문제의 중심에 당과 군부의 관료들이 있다. 그들이 국가 지대를 매개로 시장세력들을 흡수하면서 ‘권력과 부의 공생’ 관계가 제도화되었기 때문이다.

여섯째, 정권주도의 정경유착으로 자원과 능력을 갖춘 시민사회 형성이 어려운 구조로 시장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다. 즉, 시장경제 진화과정에서 성장한 시장세력들이 노동자들이나 진보적 지식인 등 사회변화 세력들과 연대하는 것보다, 권력과 이권을 쥐고 있는 지배연합에 충성을 다하는 양상이다. 따라서 독재에 대항할 수 있는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 2. 변화 경로의 차이

개혁·개방의 속도 차이 및 ‘미국과의 관계’ 변화로 드러난 라울과 김정은 정권의 상이한 행보는 다음과 같은 차이 때문이다.

첫째, 권력구조 측면이다. 두 정권은 시장시스템 진화과정에서 군부에게 독점적 이권을 주었다. 그러나 권력구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쿠바의 경우, 경제개혁과 개방의 직접적 수혜가 군부에게 독점적으로 돌아가는 제도를 갖추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군부가 개혁·개방의 직접적 수혜자가 아니다. 오히려 독재자의 통치자금을 관장하는 당기관 및 세관을 중심으로 무역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정보기관(국가보위부)이 그 직접적 수혜자이다. 특히 북한 권력구조의 핵심은 절대권력자 김정은과 김정은 정권을 수호하는 유일당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김정은 정권을 불안하게 하는 개혁이나 개방 조치를 쿠바에 비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권력구조이다. 이처럼 군부가 독재자 및 독재정당에 의존적인 구조에서, 군부는 대개 생존과 이권을 위해 개혁·개방에 보수적인 행태를 취한다.

둘째, 리더십 차이이다. 동일한 세습 독재정권이라도 라울은 오랜 정치활동 과정에서 지도력이 검증된 인물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지도력이 검증되지 않은 신생권력이다. 대개

신생 독재정권은 자신의 파워를 실험하며 전(前) 시대와 다른 리더십 및 독립적 정책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도발적인 행위를 한다. 또한 국내외 영역 모두에서 불규칙하고 실험적인 정책 변동성을 보인다.

셋째, 핵문제이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김정은 정권은 신생 핵보유 국가의 전형적 행태인 정치군사적 도발 양상을 취하고 있다. 또한 ‘경제-핵 병진노선’이라는 이중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 전략 하에서 김정은은 국제적으로 ‘핵보유 국가로 인정’받으며, 국내적으로 민심이반 양상을 타파하기 위해 돌출적인 정치군사적 도발 행태를 과시하고 있다. 2016년 1월 4차 핵실험 또한 이 연장선에 있다. 절대적 권력을 갖춘 최고지도자이자 핵보유 국가의 지도자로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김정은의 ‘인정 욕구’가 북한의 보수적 행보를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및 김정은의 독재행태를 ‘이해하지 못하며 인정할 수도 없는 국제사회’는 아직 김정은과 함께 ‘평화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넷째, 인접 국가의 정치경제 시스템 차이이다. 쿠바의 정치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미국이며, 북한의 경우 중국이다. 따라서 미국의 시스템과 중국의 시스템이 각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상대적으로 쿠바는 미국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반면, 북한은 탈사회주의 국가 중 하이브리드 경제시스템을 가장 먼저 구축한 중국경제의 직접적 영향력 하에 있다.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 하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자 하는 중국에게, 북한은 여전히 유의미한 동맹국이며 아직까지 껴안고 가야 하는 이웃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이 자신의 개혁·개방 모델인 하이브리드 경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를 원하며 이를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민족문제의 차이이다. 쿠바는 흑인과 백인 혼혈의 물라토 50% 이상, 백인 약 40%, 흑인 약 10%로 다양한 인종이 혼합되어 있다. 따라서 인구 구조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다. 다인종 국가로 집단 간 갈등구조가 복잡하여 양극화 등 ‘극단적 사회갈등’을 순치(順治)하는 작용도 한다. 반면, 북한의 경우, 상대적으로 혈통적 순수성이 큰 단일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 북한은 ‘하나의 민족이자 동시에 적’인 대한민국과 정치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남북한은 법제도적으로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정치사회적 필요에 따라 재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강력한 경쟁관계이다. 보수파가 아주 유리하며 개혁파가 언제나 간첩이라는 미명으로 숙청될 수 있는 민족 분단의 대립구조 하에 있다. 이 같은 남북관계가 북한의 국내외 정책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족문제가 첨예하고 유연한 정책 변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섯째, 종교·문화적 차이이다. 쿠바의 경우 인구의 약 85%가 카톨릭이며 약 10% 정도가 개신교인 압도적 기독교 국가이다. 따라서 현실세계의 물질적 욕구나 갈등·대립보다는 사후세계를 중시하는 카톨릭 주류의 기독교 문화가 팽배하다. 한편, 북한의 경우는 절대권력자인 수령이 신(god)과 같은 존재이며 조선노동당이 교회 조직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수령을 정점으로 한 주체사상 및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기독교의 교리처럼 작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은 당-군대-내각 모든 권력의 정점에서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살아 있는 신(수령)’이 현실세계의 갈등이나 대립을 부추기며, 주민들에게 절대적 복종과 충성을 요구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북한체제=김정은’을 위협하는 미국이나 한국 등에 대한 적대와 증오의 이데올로기가 종교·문화적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 VI. 결론: 요약 및 시사점

지난 25년 이상 북한의 정치경제는 쿠바와 유사하게 정권의 문지기 역할과 함께 하이브리드 시장시스템을 갖추며 시장경제의 진화과정을 경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앞서 다른 6가지 차이(권력구조, 리더십, 핵문제, 인접한 국가의 정치경제 시스템, 민족문제, 종교·문화적 차이)로 인해 라울 시대 쿠바와 같은 ‘현실 세계에서의 유연성’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화한 북한의 하이브리드 경제는 독재정권에게 위협적인 반독재 세력의 형성보다는, 각종 통제제도 및 수령의 지대 할당과 맞물려있다. 그 결과 정권의 지속과 세습독재의 복잡한 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장화와 함께 성장한 북한의 신흥 부유층들은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수령독재의 지배연합과 공생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 북한경제에서 권력층과 부유층이 공생관계를 맺으며 인민경제에 대한 ‘수탈적 공모’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현 단계 북한의 하이브리드 경제는 수령독재 시스템의 지속에 순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 시각에서 볼 때 역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변화 전망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주목할 점으로는 시장경제를 통해 성장한 신흥 부유층 및 중하층 관료·군부 세력들이다.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 변동, 잦은 국가정책 변화, 정책 실패 등으로 후견주의 네트워크가 불안해지고 있다. 정치권력이 요구하는 과다한 뇌물 등 ‘효용을 초과하는 비용’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체 생산력 증대에 비해 상업 및 유통이 팽배해진 북한경제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부를 축적하기 어렵다는 기업을 의식 또한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외화유입이 절실한 김정은 정권은 각종 명목의 통치자금 유입을 요구하면서 각 기관의 무질서한 외화벌이사업이 국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 주재원이나 외화벌이 간부들의 동요 또한 증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외자유치, 노동력 송출,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제-핵 병진노선’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업들을 활성화하면서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쿠바처럼 군부의 국가 문지기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이 쿠바 모델을 기술협정이라는 명목 하에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박영자 외,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김기현 역자), 『쿠바: 경제적·사회적 변화와 사회주의의 미래』, 서울: 한울, 2014.
- 신석호, 「이행기 사회주의 경제에서 인민들의 생존기술: 1990년대 이후 쿠바와 북한의 사례」, 『통일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통일연구원, 2008.
- 이성형, 「쿠바의 경제개혁: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전망」, 『경제와 사회』, 제71호, 서울: 한울, 2006.
- 한국은행, 「2014년 북한 경제 성장률 추정 결과 보도자료」, 2015. 7. 17(<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menuNavId=559&boardBean.brdid=118286&boardBean.menuid=559>, 검색일: 2015. 10. 16).
- Bildner Center for Western Hemisphere Studies, Cuba: In Transition? Edited by Mauricio A. Font with the assistance of Scott Larson, New York, 2006.
- Carmelo Mesa-Lago,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in Cuba: During the Crisis and Subsequent Recovery,” *CEPAL Review*, no. 86, August 2005.
- Daron Acemoglu and James A. Robins,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Reprint edition, New York: Crown Business,
- Douglass C. North, John Joseph Wallis and Barry R. Weingast, *Violence and Social Order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263.
- Emily Morris, “Unexpected Cuba,” *New Left Review* 88, *Newleftreview*, July–August 2014.
- Eusebio Mujal-Leon and Lorena Buzon, “Exceptionalism and Beyond: Civil–Military Relations in Cuba, 1986–2008,” *Cuba in Transition*, ASCE, 2008.
- Frank O. Mora, A Comparative Study of Civil–Military Relations in Cuba and China: The Effects of Bingshang, *Armed Forces & Society*, vol. 28, no. 2, 2002.
- Javier Corrales, “The Gatekeeper State: Limited Economic Reforms and Regime Survival in Cuba, 1989–2002,” *Cuba in Transition*, ASCE, 2008.
- Joaquin P. Pujol, “The Cuban Economy in a World of Uncertainty,” *Cuba in Transition*, ASCE, 2009.

- Jose Azel, "How to Think About Change in Cuba: A Guide for Policymakers," *Cuban Affairs*, vol. 3, issue 3, September 2008.
- Julia E. Sweig and Michael J. Bustamante, "Cuba After Communism,"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13 issue.
- Mauricio A. Font, "CUBA: In Transition? Pathways to Renewal, Long-Term Development and Global Reintegration," Bildner Center for Western Hemisphere Studies, The Graduate Center,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2006.
- Nile Bowie, "Cuba's Economic Reforms: Socialism with Neoliberal Characteristics,?" *Russia Today*, April 16, 2014.
- Richard Sharpley and Martin Knight, "Tourism and the State in Cuba: From the Past to the Fu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11, issue. 3, Article first published online: 2 September 2008.
- Young-Ja Park, "Evolutionary Peculiarity between 'the Market System and the Dictatorship' in North Korea," 한국정치학회 2012 추계학술회의 발표문, 2012. 8. 31.
- "Corruption in Cuba, The Cleanup Continues," *The Economist Online*, May 6, 2011.
- "Cuba Struggle Against Corruption and Other Economic Crimes," *Cuba Headlines*, February 20, 2012.
- "Cuba Under Raul Castro: Economic Reform as Priority?," *The Huffington Post*, February 25, 2013.
- Claudio Katz, "The Cuban Revolution: The Current Economic Reforms," *Global Research*, January 5, 2015([www.globalresearch.ca/the-cuban-revolution-the-current-economic-reforms/5422826](http://www.globalresearch.ca/the-cuban-revolution-the-current-economic-reforms/5422826)).
- Javier Corrales, "Cuba after Fidel," *Current History*, February 2005([www.amherst.edu/~jcorrales/documents/cuba%20after%20Fidel.pdf](http://www.amherst.edu/~jcorrales/documents/cuba%20after%20Fidel.pdf)).
- Vladimir Benacek, "Political Economy of Re-Integrating Cuba into the World Economy," Paper Presented at the 7th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omparative Studies, Vienna, September 2006([www.cubasocialista.cu/texto/cscdcentro.html](http://www.cubasocialista.cu/texto/cscdcentro.html)).
- Pew Research Center([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5/05/28/what-we-know-about-cubas-economy/ft\\_15-05-27\\_cuba\\_gdpgrowth](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5/05/28/what-we-know-about-cubas-economy/ft_15-05-27_cuba_gdpgrowth), 검색일: 2015. 10. 16).

